미디어 스펙트럼

'탄소 페널티' 폭탄이 날아온다..
시급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금년처럼 무더운 여름은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태풍 등 기후재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다시 소비해야 하는 셈이니, 이는 참으로 묘한 에너지 순환체계라고 하겠다.

지난달 유럽(EU)이 명칭도 폭탄처럼 들리는 시뱀(CBam·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고, 미국 민주당도 환경부담금을 외국산 제품 수입에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름이야 어떻든 탄소 배출 상품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언젠가는 아예 일정기준 이상 탄소 배출 상품의 전면 수입금지도 검토될지 모를 일이다. 본말이 전도되듯 가격, 환율, 품질 등 전통적인 요인보다 환경에 이어 노동, 인권 등이 국제무역을 좌지우지할 날도 머지않았다.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이 필연적인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하였다.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가치사슬의 아랫단인 일부 제조업종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깨끗한 공기와 개도국산 저가 제품을 소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이제 중국을 선두로 개도국들이 경쟁자로 떠오르자, 과거 오염을 수출하던 선

진국들이 이제 오염을 무기로 개도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환경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질없다

선진국 음모론 제기가 실속이 없는 이유는 국제 규범의 주도권을 선진국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는 미국과 유럽이 오래전부터 양국 간에, 메가 FTA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으로 규범화하였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WTO 협정문들을 보아도 방어가 어렵다.

첫째, WTO의 협정문에서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제조과정의 차이에 불과하고 최종 상품과 무관한 경우(NPR-PPM)에는 경쟁조건의 보장이 중요한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국경에서 국가 간 세금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WTO 판례와 통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 등이 본격화되면서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어린이 노동 등을 착취한 커피와 그러지 않은 커피(Fair trade)를 구분하여 다른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의 차이로써 상품들을 차별화적으로 인식한다면, 탄소 페널티 제도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를 큰 저항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예외 가능). 셋째, EU와 미국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같은 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허용하는 GATT의 일반적 예외(제20조)를 들어 탄소국경 조정이나 환경부담금 부과를 방어할 것이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준거는 이미 충분히 많다.

우리는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적 탄소 페널티는 우리에게 이중 타격(double blow)이다. 탄소와 에너지, 산업 구조의 미래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정에 맞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EU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2015년부터 EU 제도를 우리 식으로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행기간도 짧고 결과도 다르다. EU는 잘하는 기업을 기준(벤치마킹)으로 기업군을 나누어 인센티브·페널티를 주는 제도인 반면, 한국은 목표관리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EU가 한국의 배출권 거래의 일부분만 참작해 준다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자칫 국제 부담까지 추가로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옳지만 속도의 완급 조절과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에너지 분야가 87%, 발전 분야는 34%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비중은 석탄 36%, 원자력 29%, 가스 26%, 신재생 7%, 양수 1% 등이다. 논란이 많은 원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미래 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

가 나오고 있지만 탄소배출이 적은 발전원만을 무한정 늘려 나갈 수는 없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예상하듯, 탄소 포집활용기술(CCUS)의 이용과 철강분야의 수소환원제철도 고려하고 기저 발전을 이용하여 밤에 양수발전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활용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한다. 2030년 주요 10대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한국이 1위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인구 28위(5000만명)인 나라에서 세계 수출 7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기의 효율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약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예컨대 전력의 수요반응 시장(DR)을 현재의 기업 중심에서 모든 가정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과 가격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오픈하여야 한다.

넷째, 에너지 수급이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에너지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이 전력망(Grid) 등이 연결돼 있지 않은 에너지 섬이다.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와 같은 독과점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 및 유통 구조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에너지 가격의 거시경제적인 운용보다는, 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 간, 기업들 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칸막이와 각종 규제를 허물어야 한다. 시장이 작동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과 업종들이 변하고 공급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될 것이다. 선진국들이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이유는 개도국들이 에너지를 다소비하여 상품 생산에 열중해 온 동안에 에너지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톱다운 방식으로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정책의 경쟁력 우위로 이어지고 있다.

〈08-12〉 아주경제

이학노 / 동국대 국제통상학교수

새털보다 더 가벼운 탄소중립 시나리오

54차례 회의해 마련했다는 '초안'
요란한 구호와 허황한 대안뿐
탈원전에 무너진 현실 고민 없어

탄소중립은 과속으로 해결 못해
가장 현실적인 脫탄소 기술은
원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절망적으로 부실하다. 정부가 고집하는 탈(脫)원전을 슬그머니 저(低)원전으로 바꿔놓고, 난데없이 저석탄(1안)·탈석탄(2안)·탈

LNG(3안)를 선택지로 내민 것이 고작이다. 3개 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화려하고 당당하게 밝혔던 '탄소중립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대단한 어깃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당차게 밀어붙이던 대통령의 의지를 단숨에 꺾어놓은 공론화(시민회의) 방식을 되살리겠다는 발상도 황당하다. 근거도 파악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수치들로 가득 채워진 '초안'에서는 도무지 전문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두 달 동안 5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서 마련했다는 44쪽의 내용이 새털보다 더 가볍다. 요란한 구호와 공상과학(SF) 수준의 허황한 대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지난 4년 동안의 맹목적인 탈원전·탈석탄에 무너져버린 에너지 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성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초안이 요구하는 미래 신기술은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기술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선무당들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라면 무엇이나 뚝딱하고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에 대한 허황한 기대가 만들어낸 엉터리 소설일 뿐이다.

자동차 회사에서 시작한 수소경제는 여전히 그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新)전원'은 SF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해괴한 기술이다. 동북아 그리드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은 먼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다. 수소로 철(鐵)·시멘트를 생산하고, 석유화학의 납사(나프타)를 바이오 원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황당하다. 어쭙잖은 탄소중립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제철·정유·화학·조선·자동차·반도체 산업을 몽땅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도 심각하다. 간헐성·변동성을 극복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는 바람이 불지 않는 야간에도 전기가 필요한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한 국가 전력망을 10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전력저장장치(ESS)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발전 설비의 '용량'과 '발전량'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도 온실가스 과다 배출에 따른 기후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전 지구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질퍽한 잔치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으로의 길은 아름답고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이라는 확실한 각오가 필요하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빼놓은 '미래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함부로 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내뱉을 수도 없는 계륵(鷄肋)과도 같은 것이다. 자칫하면 탄소중립이 우리

의 일상생활과 산업·환경·안보를 포함한 미래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안전·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비전과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을 앞세운 원칙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시나리오에는 평등·공정·정의를 외쳤던 2017년 대통령 취임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정부가 뒤늦게 관심을 가진 탄소중립은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과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탈(脫)탄소 기술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신중한 자세와 미래 지향적인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임기를 8개월 남짓 남겨둔 정부가 난데없이 수준 이하의 엉터리 '미래상'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선택하는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아무도 빼지 못할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어설픈 시도는 괜한 거부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자칫하면 차기 정부에 신(新) 적폐 청산의 무거운 짐만 떠안길 수도 있다.

〈08-13〉 한국경제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탄소중립 시나리오, 원점서 다시 짜라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부득이 배출되는 양은 제거하거나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올해부터 신기후체제가 적용되고, 전 세계는 앞다투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도 이내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7억 2760만 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인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5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장기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얼마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1안과 2안은 각각 2540만 톤과 18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순배출하며, 그마저도 미래가 불확실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3안의 경우 2020년 기준 6.6%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2050년 70.8%까지 늘리고 산업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CCUS로 5,790만 톤 줄여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부지 및 비용과 같

은 재생에너지의 부작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위원회는 "3개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시나리오와 연계하기로 했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발표에 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어불성설"이라는 논평을 내었으며, 경제계에서도 "제시된 기술이나 연료전환 등 실현 가능성은 불명확하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어렵사리 마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소위 '죽도 밥도 아닌 계획'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모든 장관이 참여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한 97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2개월간 활동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이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올해 중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점과 위원회의 정식 출범 이전부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것을 고려할 때, 계획을 실현할 힘이 되는 전략의 구체성과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현재도 불가능하지만 향후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국제정세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큰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시나리오 포함된 것과 상용화가 불투명한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전력의 13.2~21.4%이나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세계적으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이 검증된 원자력은 6.1~7.2%로 이번 시나리오가 사실상 탈원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형국이다. 만약 오랫동안 노력하여 세계랭킹 1위가 된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거나 다른 종목에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08-16〉 에너지경제

최수석 /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5년 내내 탈원전 신기루 좇기

비과학적 정책에 집착하면
에너지 안보도 탄소중립도
다 놓치는 건 불보듯 뻔해

올여름 전력 성수기를 온 국민이 힘겹게 넘기고 있다. 폭염 속에 예비전력은 줄곧 간당간당했다. 안정적 전력공급 기준인 예비전력 10GW를 밑도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정부도 일찌감치 공공기관에 에어컨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산업체에 전력 피크타임에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런 고육책도 블랙아웃(대정전)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오죽하면 탄소중립이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가동 중단했던 석탄발전소들을 다시 돌렸겠나. 그것도 모자라 신월성 1호기(1GW) 등 원전 3기를 서둘러 가동했

으니….

비상 사이렌은 지난달 중순부터 울렸다. 전력 예비율이 안전권인 10% 선을 수시로 위협받으면서다. 심지어 서울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폭염·폭우로 문을 닫기도 했다. 짧은 장마 후 무더위가 찾아온 7월 하순부터 우려는 더 커졌다.

그런데도 여권은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의 사태 대비책도 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고 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엮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한다"고 언론을 탓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전국 13개 청사에 전력 소비절약 공문을 보냈다. 적폐 취급하던 원전도 차례로 재가동했다.

이는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부터 엉터리였다는 얘기다. 지난 연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전망했지만, 7개월 만에 94GW로 수정했으니 말이다. 탈원전을 서두르느라 전력수요를 낮춰 잡은 '통계 마사지'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른 꼴이다.

더욱이 엄청난 보조금을 쥐여주며 진흥한 신재생에너지가 별무효과란 사실이 뼈아프다. 태양광과 풍력 등이 결정적 시기에 제구실을 못하면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애초 신기루 좇기였음을 뜻한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면서까지 집착했지만 탈원전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대안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기롭게 내건 문 정부의 탈원전 깃발이 너덜너덜해진 지금, 이솝우화 한 토막이 떠오른다. 그리스의 한 5종경기 선수가 "원정 갔던 로도스섬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뻥을 치자, 옆 사람이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보라"던 장면 말이다. 현장에서 입증할 수 없는 약속이나 정책은 한낱 백일몽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현실적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에너지 안보도, 탄소중립도 다 놓칠 게 뻔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낸 보고서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댄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탄중위의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에교협의 판단 근거를 일일이 소개할 필요도 없다. 모자라는 전력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확보한다는 발상 자체가 탄소중립 로드맵의 공허함을 웅변하고 있어서다. 탈원전한다며 중국의 원전 전기를 수입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나. 탄소중립을 이룬다며 러시아 화력발전에 기대려는 것도 황당하다. 두 나라 전기를 끌어오려면 해저 케이블이나 북한을 경유한 송전망을 깔아야 한다. 에너지 안보를 포기한 채 떡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08-16〉 파이낸셜뉴스

구본영 / 논설위원

한국만 '탄소 중립=탈원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월 발표한

'2050년 넷 제로(탄소 중립) 로드맵'에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5%에서 2050년 1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전력뿐 아니라 수송·난방·산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 앞으로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IEA는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량이 꾸준히 늘어 2030년엔 40% 늘고 2050년엔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격히 늘더라도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에도 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50년 선진국에서는 원전 비율이 18%에서 10%로 주는 반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5%에서 7%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포인트 감소한 8%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이나 영국 북해 해상풍력 등 한국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훨씬 좋은 선진국들도 원전 비율을 축소하더라도 10%는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IEA는 선진국은 주로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수명 연장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저탄소 전력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원전 6기의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했고, 추가로 4기에 대해서도 80년까지 수명 연장을 검토 중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 탈원전 붐을 일으켰던 일본도 탄소 중립을 위해 60년 이상 가동을 검토 중이다. IEA는 또 "원자력 기술은 최근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향상됐다"며 "SMR과 첨단 원자로 설계가 실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도 했다.

전 세계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첨단 원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9%였던 원전 발전 비율을 2050년 6~7%까지 축소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30년 만에 20%포인트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IEA 로드맵에서 선진국의 원전 비율 축소(8%포인트)보다 훨씬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현실성도 결여됐다.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경제성,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전 기술을 내팽개치고,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미미해 가까운 미래 상용화가 어려운 수소·암모니아 등 '신(新)전원'을 13~21%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탈원전 이행안'이라고 하는 게 낫다. KAIF

〈08-16〉 조선일보

안준호 / 기자